

광주-고흥, 우주·미래산업 연계 생태계 구축

강기정 광주시장, 고흥서 ‘도민과 통합 상생토크’ 개최
교통복지 향상·항공우주 육성·문화관광 등 발전 추진
고흥 등 동부권에 재정 우선 투입 일자리 확보 구상 공유

강기정 광주시장은 12일 고흥을 비롯한 위기산업지역인 전남 동부권에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 일자리를 지키고 광주·전남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전남 고흥문화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고흥군 상생토크’를 열고, 고흥군 발전 전략과 통합 이후 변화상에 대해 고흥군민들과 소통했다.

이번 행사는 여섯번째 열린 상생토크로, 통합 이후 고흥의 우주·해양·농어촌 자원을 활용해 광주·전남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공영민 고흥군수,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 고흥군민 등 600여명이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

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전남 통합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 통합에 대한 정부 특전(인센티브) 등을 설명하며 통합 의지를 밝혔다.

이어 고흥군과 관련된 특별법인 특례조항으로 광역생활권 지정과 교통복지, 항공우주 산업 육성, 문화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소개했다.

특히 고흥을 비롯한 위기산업지역인 전남 동부권에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일자리를 지키고 광주·전남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상생토크에서 공영민 고흥군수는 안정적인 농어촌 재정 지원, 우주항공산업 육성, 광주-고흥 직선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인제 양성 체계 구축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전남 고흥문화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고흥군 상생토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고흥군민들이 의료 접근성 문제와 교통 불편 해소 방안,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방안 등을 물었다.

이에 강 시장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광주·전남은 인구가 320만명에서 500

만 명으로 증가하고, GRDP는 155조에서 300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통합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전남 동부권과 진주, 진해에 걸친 대규모 첨단 도시를 만들자는 구상을 공유했다”며 “그때 나온 이야기가 광양의 2차전지와 여수

의 석유화학단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강 시장은 또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이자 남해안 해양관광의 거점”이라며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역 강점을 살린 전략적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상생토크에서 제시된 고흥군민의 의견을 종합해 지역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정부 수정안, 지방분권 역행”

투자·사채 발행권 불수용… 광주도시공사, 기득권 유지 비판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제정해 위기산업지역인 전남 동부권에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 일자리를 지키고 광주·전남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전남 고흥문화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고흥군 상생토크’를 열고, 고흥군 발전 전략과 통합 이후 변화상에 대해 고흥군민들과 소통했다.

이번 행사는 여섯번째 열린 상생토크로, 통합 이후 고흥의 우주·해양·농어촌 자원을 활용해 광주·전남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공영민 고흥군수,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 고흥군민 등 600여명이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항목은 관리지 임기나 지역적인 행정 사항 등 생애주기별에 불과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투자·사채 발행 등 실질적인 경영 권한에 대해서는 ‘전국적 공통기준 필요’라는 상투적인 논리를 내세워 권한 이양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방정부를 국정 파트너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료적 시선이며 대통령과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지방자생력 강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

사로 보인다는 게 공사 측 판단이다.

공사는 지역 맞춤형 개발사업의 속도를 결정짓는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와 자금조달 핵심인 ‘사채 발행’ 권한을 중앙정부에 계속 거머쥐는 것은, 지방공기업의 중앙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박제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절차는 부처 관료들이 지정된 전문가를 거쳐야만 해, 지역의 긴급한 현안 사업들이 적기를 놓치는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게 공사 측 입장이다.

공사는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사채발행 기준인 부채비율의 법적

한도 역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500%인 반면 지방개발공사는 400%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행안부의 과도한 규제에 의해 지방개발공사는 사실상 300%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정부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적기 투자가 사실상 무산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한 후 “수용안의 문제점을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에 적극 피력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할 것이며 지방공기업법상 명시된 자율권 확보를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기업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법안은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민행배, 설 연휴 맞아 민생 행보 박차

구례·나주·영암·양동시장 등 돌며 민심투어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 출마를 선언한 민행배 의원(광주 광산)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민 의원은 13일 전남 구례에서 열리는

‘구례온’ 온기나눔 행사에 참여한다. 이 행사는 화엄사가 주관하고 화엄연합복지회를 비롯한 지역 복지기관 및 유관기관이 협력해 추진한다.

구례시장 5일장 상인과 전통시장 인근

민주당 광주시당, 지선 공약개발단 출범

“시민 체감 생활정책 발굴…광주 미래 준비 출발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양부남·사진)은 최근 ‘제1차 지방선거 공약개발단 회의’를 개최하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약개발에 본격 나섰다.

이번 공약개발단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 속에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생활제약형 공약 발굴을 목표로 구성됐다.

공약개발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현장 활동가, 정책 실무 경험자 등으로 구성돼 공약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특히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공약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광주시당은 거대 담론 중심의 정책을



남어 시민이 직접 제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약을 통해 광주 미래의 설계를 나날 실천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초지자체별 시민 수요가 높은 생활밀착형 공약을 함께 발굴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번 공약개발단 출범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책을 발굴하고 광주 미래 준비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서남권 메가시티 구상과 함께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등 지역의 미래 과제를 공약에 담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

농협법개정안 국회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연임 제한이 없던 농업협동조합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의 조성·운용 계획과 배분 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협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농협 선거 제도 개선과 내·외부 통제 강화를 위해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추가 개혁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이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그동안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사업으로 운영돼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제정법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사료·용품·서비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벤처·창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수해 면적 30ha 이상 50헥타르 미만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호천 신행정타운 조성…미래 30년 준비”

하상용 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남구청장 출마

하상용 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사진)가 광주 남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하 전 대표는 1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를 광주와 나주 혁신도시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겠다”며 출마표를 던졌다.

그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행정 변화가 아닌 남구의 중심축을 새로 짜야 하는 구조적 전환의 기회”라며 남구 대혁신을 위한 7대 전략을 제시했다. 7대 전략은 △순환경제·공유경제 통합체계 △신에너지 산업 경제 △호천 신행정타운과 광역교통망 구축 △국회도서관 분원 유치 △디지털 상권 전환 △미래인재·평생직업 전환 △실버테크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 제도약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 전 대표는 “지역우선구매제 도입, 지역화폐 실사용을 확대, 공공자



산을 공유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부가가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다시 투자·소비되는 순환경제를 만들겠다”며 “호천을 중심으로 한 남구의 행정·교통 중심축 이동을 통해 호천권을 중심으로 남구의 미래 30년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장기 과제로 남구청사를 호천권으로 이전에 신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상용 전 대표는 “행정·교통·산업이 하나의 축으로 움직일 때 남구는 주변이 아닌 중심이 된다”며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적극 행정으로 투자와 일자리, 상권과 문화가 살아나는 경제 중심 남구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새로운 광양을 여는데 앞장 설 것”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광양시장 출마 선언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사진)이 12일 광양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산업과 민생, 교육과 관광을 아우르는 ‘6대 미래 공약’을 제시하며 광양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이날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지만, 산업 구조 변화와 지역 상권 침체, 읍면동 간 생활 격차 등 복합 위기와 마주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6대 공약의 핵심은 ‘산업 대전환’이다.

그는 “철강은 광양 경제의 근간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산업”이라며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고도화를 전제로, 이차전지·친환경 소재·에너지·물류 등 미래 신산업으로의 확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양항과 관련해 “단순 물동량 중심 항만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하고, 항만·산업·교통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남해안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청년이 광양에서 일하고 정착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 종합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며 일자리·주거·문화·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출산·보육·교육·돌봄 정책을 생활권 중심으로 연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고령층을 위한 지역 밀착형 복지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시장이 되겠다”며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의 삶으로 성과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준비된 리더십으로 새로운 광양을 반드시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